<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올바른 산업정책 수립의 전제

석유화학산업이 지속적인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1994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화학 및 석유화학 투자자유화를 놓고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와 화학기업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산업계와 정부간에 투자 · 기술도입 · 수출입 · 가격 등 산업정책을 놓고 항상 이견과 줄다리기가 상존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산업의 고도화와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규제의 해제, 해외투자 제한 철폐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도 이러한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후진성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사실 정부와 화학산업계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폐지와 「공업발전법」의 입법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투자허가제가 폐지되면서부터 석유화학 투자를 둘러싸고 자유화됐느니, 완전한 자유화가 아닌 공통적이고 자율적 의견과 결정의 수렴이니 하면서 곁눈질하기 시작했고, 그 눈치보기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투자와 기술도입에 관련된 신고서를 수리해야 하는게 마땅하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과거 상공부의 관료들이 장기적인 화학산업 발전방향이나 국가의 장기비젼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없는 가운데 그때 그때의 정책적 흐름과 윗분의 심정적 변화, 그리고 사적인 관계를 고려해 정책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산업적 판단과 결정은 항상 기업들의 불만을 불러들였고, 산업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인식됐었다.
헌데 오늘에 와서도 정부와 산업계의 이같은 불신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정부의 판단이 오늘 틀리고 내일 또다시 뒤바뀌는 현상이 계속돼 산업계의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94 년말 통상산업부는 석유화학기업들의 투자신청이 줄을 잇자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유도품에 대한 투자는 자율화하되 원료의 수급조절을 통해 무절제한 투자를 절제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NCC에 대한 투자는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투자지도방침을 일부에 발표, 반응을 살피는 전략을 구사했었다. 그러나 석유화학기업들의 반발이 있자 서둘러 이를 회수, 재검토하는 촌극을 빚었었다.
정치판의 YS식 언론플레이를 재현했다고 하면 조금 유치한 판단인지는 모른다. 다만 화학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통산부 단독 또는 독단의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관련 산업계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이루어져야 실수가 줄어들고, 오류의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관련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그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다해도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 점은 과거의 산업발전사를 더듬어보면 명확해질 것이다.
만약 화학기업들이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중구난방식 또는 이해관계에 집착한 태도를 보인다면-과거의 관례상 그 가능성이 농후해 이 방법이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문연구원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그리고 소신있는 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하고 싶다.
과거나 현재나 정부정책의 오류는 객관적인 의견의 청취를 게을리한데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며, 특정기업이나 이해관계인의 그릇된 조언에 솔깃(?)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를 허락받는 자체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익을 보장받던 시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우선권을 따내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부린 것이 현실이고, 우매한 국민들이 속아넘어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특정기업이나 관계인에게 그러한 특혜를 선사할 명분을 들이대기 어렵게 되었으며, 국내적인 투자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전면 자유화되고 있는 그리고 무관세화되어가고 있는 수출입의 영향을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즉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되 사업성의 판단에 앞서 재벌들의 「힘겨루기」식 투자나 국가산업의 장기 발전방향에 배치되는가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2000년까지 흑자를 낼 가능성이 전혀 옅보이지 않는 오늘의 삼성 · 현대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무

엇인가.

객관적이고도 공정공평한 산업정책의 수립과 시행 뿐이다.

<화학저널 1995/1/23>